



‘노동개혁’도, 그에 대한 저항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 관련 기사 3면

민주노총
노동자 투쟁

3면, 2~5면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8~9면

세계경제의
재침체 위기

6면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버니 샌더스 돌풍

9면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주의

7면

아동학대의
진정한 원인

12면

한반도 긴장의
진정한 주범은
북한 핵인가

11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약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침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다.

첫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노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관철한 데 이어, 올해 제조·금융 대기업을 필두로 민간부문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조치이기도 한데,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임금체계 전반을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심화하면서 임금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지배자들에게 이는 사활적인 과제다.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은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악적이다.

저성과

둘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을 성과에 따라 줄 세위 고용도 위협한다.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 해고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도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다.

과거에 KT, 외환·국민은행 등에

서 저성과를 핑계로 직무를 빼앗고 특수 부서로 발령 내 퇴출을 압박한 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그저 ‘극소수 불성실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 다수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임금 삭감이나 노동강도 강화 같은 공격에 저항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이런 공격 중 일부는 법적 제약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의 정부지침은 바로 이런 제약을 없애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지침 강행의 목표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려고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인건비를 줄이고 상시적 해고를 가능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저성과자’는 수익성 하락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주들, 감언이설 공약을 지킨 게 없는 박근혜, 그리고 위기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자본주의 체제다. 노동개약은 자신들의 ‘저성과’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악랄한 공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고 협박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나섰지만(법무장관 김현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ISIS 테러와 북핵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했다!), 이 투쟁이 실질적으로 조직될 때만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김문성



정부지침이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뻔뻔한 박근혜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정부가 2대 행정 지침 발표 강행에 이어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계를 자체로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피크제로 시작돼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은 나이와 근속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연공제 임금체계를 바꿔 임금 삭감 효과를 내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 저성과자 퇴출제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일반 해고 완화 지침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에 성

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우선 도입해 성과 중심의 인사·임금체계를 확산하려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관철해 임금체계 개편의 물꼬를 튼 후,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즉 정부는 대체로 정년이 보장된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철밥통’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노동개혁’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려 한다. 이와 같은 성과주의 강화 조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부문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과 생산성은 공공서비스

를 더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는 거리가 멀다.

이미 정부는 악명 높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공공기관들이 수익성을 중시하고 비용 절감을 추구하도록 유도해 왔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이와 같은 압박을 더한층 가할 것이고, 그리 되면 공공부문의 공적 기능은 더 약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과 평가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이 연동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가져다 줄 게 뻔하다.

예컨대 정부가 제시한 누적식 성과연봉제에 따르면 (좋은 성과를 받은) 소수를 제외한 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하거나 삭감된다. 특히 누적식 제도는 노동자들 내 임금 격차를 점점 크게 벌리는데다 좀처럼 좁혀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성과 평가 강화는 노동자들을 경쟁에 내몰아 파편화와 분열을 키워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대폭 악화시킬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에 서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하려 하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정원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현중, 김광웅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 법률의 위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라며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사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법으로 그 자체가 악법이다. 그런데 현재와 법원은 교원노조법은 차치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삼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역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삭제된 ‘노동조합 해산 명령’을 노태우 정권이 ‘법외노조 통보 규정’으로 몰래 부활시킨 악법이다. 해직 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탄압한 사례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한국뿐이다.

그래서 OECD 노조자문위(TUAC)와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라고 경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등도 박근혜에 전교조 설립 취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소한의 정의마저도 내팽개치고 박근혜의 전교조 탄압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 법원이 정부와 같은 편에 서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법은 결코 만민(萬人)에 공평하지 않고 매우 계급 차별적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법외노조 ≠ 불법 단체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전임자, 노조 사무실, 단체협약 등 전교조 활동에 보장된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보수 교육감은 이에 응했다. 그러나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지급처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된 것은 절대 아니다. 노동조합으로서 법률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과 불법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교섭을 체결할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

또, 박근혜가 전교조를 없애 버리고 싶을 만큼 전교조에 적대적이라고 해

도, 생각과 실재는 구별해야 한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박근혜가 상대하는 노동조합은 투쟁 경험이 많고 잘 조직돼 있을 뿐 아니라 결정적인 패배도 겪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공무원 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나서도 (비록 연금 개악을 위한 꼼수였지만) 대타협기구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것도 조직력이 강한 노동조합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맞서자

물론 정부는 이번 판결을 기회 삼아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내부에 합법주의를 지향하는 흐름을 부추기고 싶어 할 것도 같다.

심각한 경제 위기 책임을 떠넘기려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관철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전교조는 투쟁 능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 장차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개정·폐지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도 전교조(와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력이 고양돼야 한다. 그럴 때 국회도 법 개정 압력을 받을 것이다. 1999년 (비록 온전치 못했는지라도)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96년 12월 ~ 1997년 1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 덕분이었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 이 글은 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월간 신문인 <별떡교사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수정해 보낸 것이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시리아가 제국주의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기까지**

★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 서평

<박성표 평전—부조리에 대항한 시민과학자>

촛불을 들고 끝까지

부조리에 대항해 온 삶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고립시키려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피크제를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박근혜의 ‘노동개혁’이 노리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 하락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소위 ‘기득권’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해 관찰시켰는데, 이를 지렛대로 민간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까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취업규칙 행정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안) 적용 공세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조직 노동자들은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고립시켜 공격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조 방어막도 없는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공격하려 한다. ‘이간질해 각개격파하기’ 전술이다.

쉬운 해고 행정지침(공정인사 지침)도 ‘기득권’ 노동자들만을 노린 게 결코 아니다. 진보진영에조차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전체 고용의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의 문제”(김동춘 교수)라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하고 가이드라인’ 도입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시작한 2015년에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저성과 해고는 급증했다. 여기서 보듯이, 쉬운 해고 행정지침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성과를 빌미로 더 쉽게 해고되고, ‘부당해고’로 구제되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이 증대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쉬운 해고 행정지침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금융분야에 이어 올해 조선업과 건설업에서 구조조정



연행일치 실질적 파업이 박근혜의 집요한 ‘노동개혁’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작업장별 대응과 총선이라는 투트랙보다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파업이 효과적이다.

이 예상되고 있다. 또, 곧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통과되면 경영상 위기가 아닌 기업도 고용승계 부담 없는 구조개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등의 이름으로 기업 비용절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쉬운 해고 행정지침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은 기업주의 ‘저성과’ 잣대에 의해 교육훈련과 배치전환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 해고의 길로 더 쉽게 내몰릴 것이다.

말과 행동의 격차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부위로서 박근혜가 조직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에 강요하는 조건 약화에 맞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무기한 총파업”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인 가맹 산하 노조 위원장들 자신이 자신들의 조직으로 돌아가서는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지도부(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비교적 빨리 지침을 내놨지만, 27일 4시간(주야2시간) 파업과 26/29일 확대간부 파업 명령에 그쳤다. 강한 조직력과 투쟁 전통이 있는 금속노조에 기대되는 바에 비춰 보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행정지침 발표 시 “끝장 파업”을 하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었는데도 말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약법이 국회에 상정되거나 정부가 각종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일 때 전면적인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때의 파업은 2시간 또는 4시간짜리 시한부파업이 아니다. 정치총파업이다.”(2015년 10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설상가상으로, 금속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주요 성원들인 현대차지부장과 기아차지부장은 다시금 파업 지침을 축소했다. 김성락 기아차 집행부는 27일 확대간부 파업만을, 박유기 현대차 집행부는 집회 참가만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못지 않게 크고 힘 있는 노조가 많은 공공운수노조도 크게 미흡한 지침만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쟁의권이 있는 조직의 파업 참가를 결정했으나, 현재 쟁의권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집회 참가만 정한 셈이다. 민주노총의 나머지 가맹노조들도 대부분 대응소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계약에 맞서 어느 정도 저항을 했다. 지난 11월 14일 10만 민중총궐기 대회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우리 실력이 여기까지”라거나 법률적 제약을 탓하면서 총파업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총궐기 이후 현장의 투지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 일부 책임은, 정부의 탄압을 별문제로 하면, 총궐기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민주노총 지도자들 자신에게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대부분 파업 연기, 유보와 축소, 철회 같은 것들이었다. 아직 결정적 때가 되지 않

았는데도 투쟁을 ‘남발’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총파업을 회피했던 것이다.

노조 지도자들이 총선 전에는 노동계약이 되지 않을 거라고 내심 기대하면서 국회(또는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의원들)를 쳐다본 채 투쟁을 미루는 동안 조합원들의 투지가 늡늡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낮은 임금, 쉬운 해고 행정지침을 정부가 강행한 지금 노동자들의 분노는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산별·노조 지도자들이 민주노총의 결정대로 현장에 파업 지침을 내린다면 그런 부문이 먼저 파업에 돌입하면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에 파업지침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노조 지도자들 상당수는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지침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대선에서 대응하자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들의 당면 투쟁 계획이 충분치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와 기업주가 행정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려 할 때 이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투쟁을 ‘경제주의’라고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성과가 다른 사업장의 투쟁을 고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입단협 때 두고 보자며 투쟁을 미뤄뒀선 안 된다. 일부 노조들이 입단협 때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부지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소수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미조직·비정규직, 취약노조 노동자들의 조건도 함께 방어하려

면, 민주노총의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나서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기업주들이 함부로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을 외면한 결과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 지침이 적용되고 이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으면, 결국 잘 조직된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 돌아올 수 있다.

노동개약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제도 개혁을 기대하며 행정지침 철회 투쟁을 흐지부지한 채 총선 대응으로 바통을 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단호한 정치 투쟁에 나서지 않고 국회에 의존하려 한다면, 노동자들이 원하는 개혁을 쟁취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진보정치 세력이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 수는 많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총선 대응론은 더민주당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문제는 더민주당의 거듭된 배신 행위다. 지난해 말에도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 통과,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삭감 등에 합의했다.

노동약법 5개를 전부 반대한다더니 얼마 못 가 파견법·기간제법 등 2개만 반대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이제는 파견법도 협상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꾀죄죄함은 더민주당이 포퓰리즘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들에 기반한 당이기 때문이다.

작업장별 대응으로 투쟁을 미루고 분산시키는 것도, 또 총선에 기대는 것도 정부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 제도와 법률은 포퓰리스트 자본주의 야당에 의존해 개선하고 산하 노조들은 사업장에서 입단협을 통해 노동조건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정치운동과 경제투쟁의 역할분담론이다. 이러한 정경분리는 투쟁 확대의 장애물이다. 또한 개혁(개량)주의의 운상이다.

행정지침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사용자들의 이윤을 타격하는 강력한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경제적 힘을 과감하게 사용해 박근혜에 맞선다면 그의 집요한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현장의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그저 형식적인 몇 시간 ‘파업’이나 집회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내는 파업이 되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우리 실력이 여기까지”라거나
법률적 제약을 탓하면서
총파업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 이 글의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올해 하반기 수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 노동자들이 수서KTX를 철도공사로 재통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2013년 12월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서KTX 운영을 민영화하려는 계획 속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SR을 설립했다.

수서KTX 분할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겨울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수서KTX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므로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철도에 ‘경쟁’을 도입해 철도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서KTX 개통을 불과 몇 개월 남겨 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그런 주장이 순전히 거짓말이고 철도노조와 민영화 반대운동의 경고가 옳았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첫째, 수서KTX 분할은 효율성을 높이는커녕 엄청난 비효율을 보여 주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주)SR은 기관사업무를 제외하고, 역 업무 대부분, 차량 정비 업무 전체, 선로와 전기·신호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핵심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도대체 수서KTX 운영 회사가 왜 따로 있어야 하느냐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 (주)SR이라는 별도 회사에 철도공사와 거의 흡사한 관리 조직을 두고 철도공사와 경쟁하기 위해 홍보·광고비를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철도 민영화 반대운동이 주장

한 것처럼 (주)SR은 안전 문제에서 매우 취약하다.

국토부는 철도 건설 부채를 빠르게 갚기 위해 (주)SR의 선로사용료를 현 철도공사보다 높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로사용료는 철도 운영자가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그러자 (주)SR은 수익성 압박을 줄이려고 철도공사 위탁 업무의 비용을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철도공사는 늘어날 차량 정비 업무의 절반 이상을 외주 위탁하려 한다. (현재 차량정비의 외주화는 30퍼센트 수준)

이는 (주)SR을 통해 철도공사에 비용 절감 압박을 넣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주)SR은 심지어 비상 대기와 사고 복구 업무 같은 안전 업무도 위탁할 예정이다. 철도 운영사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내팽개치는 무책임의 극치다.

셋째, 철도 노동자들이 우려했듯이 (주)SR과 철도공사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미 (주)SR은 기관사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주)SR은 기관사들의 근무시간을 월 1백74시간으로 늘리고(철도공사 기관사는 월 1백65시간),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취업규칙과 단협에서 노동강도 강화(철도공사보다 승무율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등을 강요했다고 한다.

(주)SR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화물 열차와 지방선 운행 등으로 (주)SR보다 적자가 큰 데다, 수서KTX가 개통되면 철도공사의 기존 고속열차 수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돼 ‘인력 효율화’와 비용 절감 압박은 더 커



수서KTX의 문제들을 보면 그간 민영화 반대 운동의 경고가 옳았음이 드러난다 2013년 당시 철도 파업 집회

질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철도공사가 (주)SR의 위탁 업무를 낮은 비용으로 맡으면서 정규직 종원 대신 대규모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도 머지 않아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공공서비스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효율성, 안전, 공공서비스 질·유지 향상에 필수적인 노동조건 등 모든 측면에서 수서KTX 분할은 실패작이 될 공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가 수서KTX 재통합을 요구하며 나서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다. 철도노조는 1월부터 광주에서 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5백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또, 총선에서 수서KTX 재통합 요구를 적극 알려 나가려

는 계획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KTX법대위 재가동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수서KTX 개통뿐 아니라 철도공사의 단계적 분할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정부는 수서KTX 분할 이후에도 철도공사 분할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복수의 철도 운영자’들을 도입해 ‘경쟁’시키기 위해 철도공사에게 관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 (〈노동자 연대〉 162호에 실린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기사를 참고하시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사측은 지난해 화물사업부제에 이어 올해 차량과 시설유지 부문에 각각 사업부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각 사업부마다 수입과 지출, 적자를 따로 계산하는 구분회계

가 도입돼 적자 요소가 더 부각될 것인데, 이는 외주화를 비롯한 인력·사업 구조조정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수서KTX 재통합 요구와 함께 철도 분할 민영화(사업부제 시행 등),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인 외주화에 반대하는 요구와 투쟁도 함께 결합해 나가야 한다.

올해 정부는 공공부문 민자 투자 활성화,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을 통해 우회적 민영화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비스기본발전법 제정을 통해 의료, 교육 등의 민영화도 가속화하려 한다. 지배자들의 이런 계획 속에서 철도 민영화 역시 계속 추진될 것이고 가장 선도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도 민영화 반대 요구는 중요한 쟁점으로 삼고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켰다. 1월 22일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2퍼센트가 합의안에 반대했다.

앞서 20일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 등은 내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사측은 이번에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 취하를 전제로 일부 근속을 인정하는 신규채용안을 고집했다. 지난해 9월 64퍼센트의 높은 반대로 부결된 신규채용안보다 근속 인정 기간과 보상금이 약간 늘기는 했지만, 크게 차이는 없었다.

울산비정규직지회 집행부가 이런 안에 합의한 데는 1월 27일로 예정됐던 2심 판결이 외곽부서 등 적잖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또 다른

일부에게는 유리하게 나오는 식으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무엇보다 사측의 탄압과 압박 속에서 2014년 정규직지부와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 집행부가 체결한 신규채용 합의를 용인할 것 인지를 두고 급속노조 내 논란이 벌어지고, 지회 내에서도 이탈자가 생기고 활동가들이 지쳐가는 등 투쟁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난해 9월 신규채용 합의 때보다 반대표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잘못된 합의를 거부하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줬다.

1월 21일 부산고등법원이 한국지엠 창원 사내하청 노동자 5명 전원에 불법파견을 판결한 것도 이번 부결에 영

향을 준 듯하다. 한국지엠 판결에서 5명 중 두 명만이 조립공정이었고, 나머지 세 명은 생산관리·KD포장 등 외곽부서였다.

그동안 신규채용 합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아산비정규직지회의 양희삼 신임 지회장은 이번 부결의 의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울산 동지들이 신규채용안을 부결시켜 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조건이 어렵지만,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의 사용자는 현대차입니다. 사측은 최소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존 근속과 공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2014년에] 아산 비정규직지회 집행부가 8·18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규채용 합의를 거부한 노동자들이 비대위를 구성했고, 지금 새롭게 집행부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입

장은 신규채용 거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급속노조도, 정규직지부도 우리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최근 현대차 사측은 아비하게도 재판부를 설득해 2심 선고를 4월로 연기시켰다. 이렇게 시간을 벌며 다시 노동자들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십수 년간의 불법파견 논란 속에서 사내하청급 관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한 사측은 신규채용이라는 수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측은 이를 통해 소송 취하를 압박해 법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오랜 기간 사내하청으로 일해 온 숙련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흡수해 정년퇴임자 증가에 대응하려 한다. 한 해 5백여 명에 이르는 현대차의 정년퇴임자 규모는 곧 1~2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사측은 ‘합법 파견’을 위한 법개약을 피하면서 기존 법령의 제조업 파견 제약을 해소해 앞으로 안정적인 사내하청 고용을 지속하고자 한다. 현대차를 비롯해 제조 대기업들이 ‘뿌리 산업 파견 확대’ 등 파견법 개악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렇게 볼 때, 제조업에 만연한 파견은 결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현대차의 비정규직·정규직 활동가들이 굳건한 연대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 개악 저지라는 운동의 원칙을 확고히 하며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박설

서울대 음대 강사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맞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는 교수의 공석 이 많아 전공실기 수업에 절대적으로 강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악대학 강사들에 따르면,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20과목 대부분을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강사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대 당국은 정규교원 1백 퍼센트를 충원하기는커녕 기존 강사의 해고를 묵인하면서 고용 여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 여건도 열악하게 하고 있다.

서울대 음대는 통상 5년마다 성악과 강사를 공개 채용해 왔다. 2014년 채용공고문에는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5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강사들은 성악과 ‘내규’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갱신기대권’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 말, 성악과를 비롯한 음대에서 강사 1백13명을 전원 해고하고 신규 강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음대 측은 기존 강사들의 고용 보장 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12월 2일 음대 웹사이트에 강사 신규 채용을 공지했다. 이전까지 성악과에서는 공개 채용 후 1년 만에 ‘해촉’되거나(강사 위촉을 해지했다는 뜻으로, 해고와 같은 의미다) 1년 후 다시 신규 임용 오디션 절차를 밟은 적이 없었다.

12월 7일 성악과 강사 55명 중 40여 명이 신규 강사 채용 공고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음대 측에 전달했다. 성악과 학과장은 강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국회가 시간강사법을 폐지할 시에는 공고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입장을 바꿔 시간강사법과는 무관하게 ‘음대법’에 따라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2월 31일 시간강사법 시행은 2년 유예됐지만 그날 음대는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강의와 면접을 강행했다. 서울대 본부는 음대 강사 문제에



한꺼번에 강사 1백여 명이 해고된 서울대 음대의 모습은 전국 대학 강사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 준다.

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강사들의 저항과 학내 연대

집단 해고 위기에 처한 음대 강사들은 12월 22일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강사 대량해고 시도 규탄 및 시간강사법 시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다.

“만약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특정 인물 몇 명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잡질’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대학 안의 수많은 ‘을’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갑

질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행되지도 않을 법에 근거한 공고, 갱신기대권과 관행을 무시한 대량해고, 강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부정하는 반노동적 태도는 서울대에서 지속되어서는 안 될 구태이다.”(기자회견문중)

음대 강사들은 생애 처음으로 학교 당국과 맞선 투쟁을 결의하고, 12월 29일부터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했다.

1월 12일 서울대 학내 단체들이 모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집단 부당해고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 활동은 음대 강사들의 싸움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고무적이다. 공대위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3월까지 음대 강사들과 함께 천막 농성장을 사수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내 행사들을 활용해 부당한 집단 해고를 알릴 계획이다.

공대위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 집단 부당해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학내 비정규직 문제, 민주주의 문제, 차별과 인권 문제, 교권과 학생 수업권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법안화된 뒤 서울대 당국은 비용 절감과 노동 통제를 위해 외주화를 추진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

다. 이 때문에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분회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대학 본부 측과 싸우고 있다. 이런 투쟁의 주체들이 대학 공공성을 저해시키는 학교 당국에 맞서 함께 투쟁을 벌여 나갈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야

정부가 시행을 추진하는 시간강사법은 대학이 몇몇 강사들에게 강의를 몰아 주도록 사실상 유도한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은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될 것이라며 시간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대체임법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대부분 대학은 올해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지난해 2학기부터 ‘선(先) 강사 대량해고, 후(後) 일부 강사 임용 조치’를 준비했다. 비록 지난 연말에 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이런 공격도 대체로 미뤄졌지만, 이번 서울대 음대의 대량해고 시도는 향후 시간강사법이 시행됐을 때 훨씬 더 광범하게 벌어질 문제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2월 24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도 소속 시간강사 67명이 해고됐다.

이처럼 서울대 음대 투쟁은 전국에 있는 대학 강사들이 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평생 화려하게 무대에 서서 노래만 하고 우아하게 학생들만 가르칠 줄” 알았았던 서울대 음대 강사들을 영화의 날씨에 천막 농성으로 내몬 것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 영역의 시장화 압박 체제이다.

결국, 대학 노동자와 학생, 비정규 강사,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연대해 박근혜식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건설할 때 실질적인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김민정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합의한 김성락 기아차노조 집행부

좌파 집행부의 불필요한 타협, 대안은 무엇인가?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연초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안은 이 외에도 통상임금, 8+8 교대제 전환 등 주요 요구를 뒤로 미루거나,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문제점도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이번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그 대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이는 올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사측이 고안한 꼼수였다. 이에 대응해 김성락 집행부는 초기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사측이 정규직의 임금 인상폭을 현대차 수준으로 맞춰 주자 곧바로 투쟁을 접고 임금협상을 타결해 버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 삭감에 대해서는 눈감은 것이다.

비록 합의안이 가결됐지만, 특히 비

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한 합의안은 좌파를 자처한 김성락 집행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김성락 집행부를 배출한 ‘금속노동자의힘’(이하 금속힘)에서 비정규직 회원들이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도 자기 집행부가 체결한 합의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성락 집행부는 이후에도 유감스럽게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간부 파업”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로서 수많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서 싸워야 할 책임을 방기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행보는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좌파가 노동조합 지도권을 장악하고

나면 불필요한 타협과 투쟁 회피에 휩싸이는 일이 지난 십수년간 노동운동 내에서 자주 벌어져 왔다. ‘현장파도 집행부에만 올라가면 국민파가 된다’는 말이 이 때문에 나왔다.

이는 좌파도 사측과 기층 노동자들 사이에서 줄타기 하며 협상을 중재하는 노동조합 지도자가 되면 보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는 사용자들이 강경하게 양보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려는 상황이 되므로,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 없으면 노조 지도자들의 보수성은 더한층 강화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노조 지도자는 누구나 하나같이 배신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기계적 결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쉽게도 일부 금속힘 활동가들은 ‘집행부를 해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 있다’며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기층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고무하지 않고 그저 지도부가 받는 타협 압력에 순응할 것이라면 도대체 좌파의 선거 도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동안 많은 좌파 활동가들은 자신이 배출한 지도부를 감싸고 떠받치는 데 급급해 점점 온건화되고 사기가 떨어져 왔다. 지난 몇 년간 금속힘이 혼란과 위기를 겪고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몇 달 전 선거에서 김성락 당시 후보는 이전 자기 집행부 시절의 무쟁의 전력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지 않은 채 온건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때도 대다수 금속힘 활동가들은 후보에게 성찰을 촉구하기보다 집행권 장악을 목표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지적했듯이, 이런 활동은 투사들에게 독

이다. 자신의 활동을 철저히 돌아보지 않고 집행부의 잘못에 눈감으면, 부지불식간에 좌파적 원칙에 금이 가고 기회주의적 타협이 ‘노조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둔갑하기 십상이다.

이 같은 맹목적인 좌파 집행부 세우기 전략의 대안은, 소수지만 굳건한 혁명가들의 조직을 기층에서 구축해 진정으로 좌파적 원칙에 입각해 노동자 단결을 위한 전술을 내놓고 투쟁을 조직해 나아가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노조 집행권 장악에 급급해 위만 쳐다봐서는 좌파적·투쟁적 노선을 견지해 나갈 수 없다.

그리고 혁명적 정치에 확고히 기반을 둔 조직을 건설해 나아가갈 때, 노동조합 내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문주의적·경제주의적 위험이나 관료적 질서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설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

강동훈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고(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경제가 1930년대 대불황 때처럼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돈 풀기와 경기 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 위기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한 듯하다.

올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주가 급락에서 시작된 전 세계 주가 급락으로 드러났다. 1월 15일까지 전 세계 증시에서 7조 달러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의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다섯 곱절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영리한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금융 시장을 보면 2008년에 겪은 일들을 상기시키는 심각한 도전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증시는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급등했다. 중국 정부는 계속 커지는 부동산 거품을 진정시키는 한편, 중국 기업들이 부채를 갚고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시를 지목하면서 폭등을 부추겼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 기조를 보이자, 당시 중국 증시는 상하이종합지수 기준으로 3천 선에서 5천 선까지 폭등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이후 중국 주식시장이 세 차례 폭락하고,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정부가 급작스럽게 위안화 평가절하까지 단행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지난해와 올해에 나타난 중국 주가 급락은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경제 통제력이 다소 약해졌음을 보여 준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위안화 공급을 늘려 위안화 가

치를 적당히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 그러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위안화 평가 절하에 베팅하면서 중국 주식을 내던지고 위안화를 달러·유로·엔화 등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중국 증시와 외환시장이 요동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상당한 외환보유액을 투입해야 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천억 달러(4조 달러에서 3조 3천억 달러로)나 줄었다. 특히 지난달 감소액은 1천80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중국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는 중국 정부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웠고,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과잉 설비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어, 막대한 부채와 과잉투자로 성장률을 유지해 온 것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업체 맥킨지의 조사를 보면, 중국의 정부·기업·가계 부채는 2014년 중순 기준 28조 달러(약 3경 3천796조 원)로,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2백 82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서도 중국의 비금융기업부채는 2010년 1백24퍼센트에서 2014년 1백57퍼센트로 급상승했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분명해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투자자들은 중국의 부동산·기업 부채 거품이 폭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에서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실질금리를 높여 채무를 서둘러 갚으려는 채무자들이 늘게 되고, 이는 자산가격



중국 정부가 환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채무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상장기업 2천 7백여 곳 가운데 3년 연속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좀비기업’은 전체의 10퍼센트나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강기업 중 90퍼센트가 적자 상태고, 석탄 기업 2곳 중 1곳은 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그러나 철강·석탄·시멘트·조선 등 과잉 설비가 특히 심각한 산업만 구조조정하더라도 중국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면 부도 기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중국 정부는 계속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고, 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낼 수 있다.

환율 전쟁과 디플레이션

한편, 미국은 2016년에 금리를 인상하는 데 반해, 유로존·일본·중국은 수출 증대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를 발행한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불일치와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유로존·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이 함께 돈 풀기에 나서 금융 위기를 진정시켰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통화정책의 불일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위안화 가치 절하는 유로화·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유로존·일본이 수출을 늘리고 물가를 끌어올리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다른 한편, 전 세계적인 성장을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에도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하락 압력은 계속되면서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다. 유가의 경우, 석유 수

요가 둔화하는 데도 중동 산유국들과 미국 셰일석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져 2016년에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당분간 세계경제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돈 풀기와 금리 인상이 교차하며 불안정성이 커질 듯하다. 이에 따라 국가들 사이에, 그리고 각국의 지배자들 내에서 갈등과 경쟁도 더욱 격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에 맞서 싸워야만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노동자계급정당’ 창당에 부쳐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월 31일 창당한다. 2013년 11월 추진위를 띄운 지 2년여 만이다. 시간을 더 길게 잡으면 2008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 준비위원회’(사노준)와 2010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간난신고 끝에 창당하는 것을 노동자연대의 연대협력 담당자로서 축하한다.

기존 진보 정치 세력들 중 일부가 재편과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온건화 압력에 타협하는 듯한 지금, 추진위가 사회주의 강령을 표방하며 창당하는 것은 뜻깊다.

일부 사람들은 추진위의 창당을 앞두고 강령에 사회주의를 명시하면 등

록 정당이 될 수 없고 대중적 지지도 얻지 못할 거라거나, 투쟁이 아니라 대안 프레임을 제시하라거나, 심지어 더 민주당과도 ‘선거연대’를 고민하라고 조언하는 모양이다. 나는 추진위가 이런 온건화 압력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믿는다.

한편, 나는 추진위 동지들과 자주 공동 활동을 하면서 추진위의 정치적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추진위의 기관지 〈변혁정치〉는 과거 사노준과 사노위 시절보다 정치적 쟁점들을 더 자주, 꾸준히 다뤘다. ‘조합주의’(신디컬리즘)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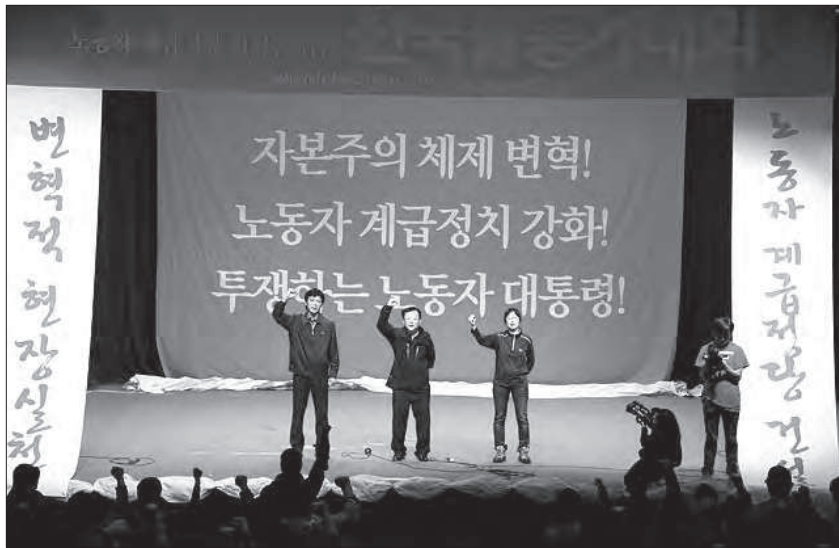
또, 개혁주의 정치 세력들에 대해 (“민주당 2중대”라고) 단순히 낙인찍는 비판이 아닌 “더 왼쪽으로 좀 더 아래로 재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

하기도 했다.(누구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종국적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2013~14년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산 공격에 반대해 추진위가 열심히 방어 운동을 전개한 것도 눈에 띄었다. 김태연 정책교육위원장은 나와 함께 ‘내란음모공안탄압대책위’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더 폭넓은 공동 활동 영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 추진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 열의를 보이면서 세월호국민대책회의에서 NGO와 NL과 함께 운동을 건설했다. (2015년에는 창당 준비에 집중하면서 공동 활동에 불가피하게 소극적이었지만 말이다.)

정당 건설과 공동전선 활동은 원칙



추진위가 정당 건설과 공동전선 활동을 적절하게 병행하길 바란다 2012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대회.

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니다. 특히, 개혁주의 세력에 대해 종파적 적대감을 드러내기보다 그들과 함께 협력해 운동을 건설하면서 그 속에서 투쟁의 리더십을 대중적으로 입증받을 기회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진위나 노동자연대나 모두 한국

노동자계급 운동의 미래를 짚어준 좌파의 일부로서 운동 속에서 배우고 또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서로 협력하면서, 또 건설적 논쟁과 토론도 하면서 둘 다 전진하면 좋겠다.

최영준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선영

오늘날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정책 중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온 쟁점이다. <노동자 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다룰 계획이다. 이 글은 축약본이고 전문은 웹사이트에 실렸다.

지난 십수 년간 다문화주의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2010~11년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상들이 잇달아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공식 선언했다. 2015년 12월에는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 “다문화주의는 허구”라며 난민 수용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각국의 지배자들은 다문화주의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가 성장했다고 비난했다. 지배자들은 다문화주의를 통해 인종간 조화를 추구해 왔지만 사회의 응집력이 강화되기는커녕 집단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격리된 공동체”들이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황당한 책임전가다. 아이시스(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성장하고 테러가 늘어난 데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수백만 명을 학살하며 벌인 중동 전쟁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오히려 무슬림들은 옛 소련이 몰락한 후 서방이 이슬람을 악마화하며 전쟁을 벌인 것 때문에 피해받아 온 집단이다.

소수 인종 배려 정책 때문에 소수 인종들이 “격리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게토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무슬림 등 소수 인종이 빈민가에 밀집되는 것은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주민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이지 이주민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주민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는 것과 맞물려 있다. 파시스트 정당인 프랑스 국민전선(FN)은 “2백만의 이민자는 2백만의 실업”이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이주민들이 실업과 복지 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한다.

그러나 유럽 나라 대부분이 경제가 호황일 때 대규모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했는데, 경제 위기가 닥치자 이들에게 실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게다가 유럽에서 무슬림의 실업률은 평균의 갑절에 이르는 것에서 보듯 이주민은 경제 위기로 더 높은 실업난을 겪는 피해자들이다.

이데올로기적 공격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후퇴하고 있다. 이민자가 받는 복지를 삭감하고, 수용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규정 등이 강화됐다.

이렇게 지배자들의 다문화주의 공격은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낳은 문제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유럽의 파시스트 세력들은 이런 악선동에 힘입



이주민 190만 시대, 우파의 다문화주의 공격에 맞서는 것은 한국에서도 중요하다 서울 이태원의 모스크 앞을 지나는 무슬림 가족.

어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격은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좌파들이 다문화주의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좌파들의 혼란

그런데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좌파들 내에 혼란이 있다. 특히 프랑스의 히잡 논쟁에서 그 혼란은 크게 드러났다.

1989년에 한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이 히잡을 벗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퇴학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2004년과 2011년에 공립학교와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히잡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히잡이 여성 억압적이라

고 주장했다.

그러나 히잡 착용을 단순히 여성차별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프랑스 지배자들이 알제리를 식민 지배했을 때 여성들의 전통 복장을 금지하자 알제리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확대했다. 프랑스 제국주의에 맞서 무슬림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항의한 것이었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법으로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한다면 그것에 저항해야겠지만, 법으로 히잡을 벗으라고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억압적이다.

서구 사회에서 무슬림은 가장 천대받는 집단이다. 히잡 착용 금지는 무슬림을 속죄양 삼는 수단으로, 위선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런데도 프랑스 좌파들은 뼈아픈 오류를 저질렀다. 2004년 노동자투쟁

(LO)은 히잡이 “여성의 굴종”을 상징한다며 히잡 금지 법안을 지지했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반자본주의신당 NPA의 전신)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모호한 입장을 취해,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에 맞선 반전 운동이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데에는 프랑스 좌파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런 잘못된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이는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이 크게 성장하는 것에 맞서는 데도 약점으로 작용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지배자들과 파시스트에 맞서 무슬림을 방어하며, 무슬림과 함께 운동을 건설한 영국과는 대조적이다.

문화 상대주의?

히잡 논란에서 드러난 더 근본적인

논점은 만약 소수 집단의 문화적 관습이 여성의 권리 등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는 듯 보일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와 연결돼 있다. 일부 사람들은 다문화주의는 후진적·보수적 관습도 고유한 문화라며 옹호하므로 보편적 가치를 저버린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슬라보예 지젝은 다문화주의에 반대해 왔는데 최근에는 “서구의 가치(평등주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 복지국가 등)”를 옹호해야 한다고 더욱 분명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 내에 존재하는 여성차별적이거나 비민주적 문화도 무조건 옹호한다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

다문화주의는 억압받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자는 것이고, 대다수 다문화주의자들이 억압적 관행을 ‘문화’의 일부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문제는 억압적 관행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이다. 억압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의 힘에 기대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반감을 키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국가의 힘을 키워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흔히 ‘후진적’ 문화를 계몽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침략을 정당화해 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으로 억압적 관행에 맞서 민주주의와 여성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에서 나올 수 있다. 1979년 이란 혁명 과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직장 보육원 등이 추진되며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조치들이 추진됐듯이 말이다.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의 아래로부터 투쟁을 지지하는 관점에 섰을 때 우파의 공격에 맞서 다문화주의를 방어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억압 받는 소수 인종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해야, 억압하는 국가의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집단의 노동계급 간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다문화주의는 사회가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는 관점을 전제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를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 속에 변해 왔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농촌이나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을 빠른 속도로 도시의 노동계급으로 편입시키며 다양한 문화가 끊임없이 재합성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을 두고 사람들을 서로 경쟁시킨다. 이를 위해 지배자들은 끊임없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한다.

특히 냉전이 붕괴한 이후 서구의 지배자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체계적인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차별과 편견에 맞서 자존감을 지킬 방법으로 스스로 이슬람 정체성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이주민 공동체들이 이른바 ‘우월한’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중

심으로 단결해 인종차별에 맞선다는 전략에는 약점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소수 인종의 공동체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2010년에 유럽연합 내 무슬림 인구의 비율은 4퍼센트가량이다. 1960년대 위대했던 미국의 흑인 민족주의 운동도 지배계급이 흑인 급진파들을 고립시키면서 파괴한 바 있다. 승리를 위해서는 더 큰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무슬림, 중국인, 흑인 등의 고유한 정체성이 강조되다 보면 인종간의 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 지배계급은 이런 분열을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 공동체를 강조하는 전

략보다는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오늘날 이주민 집단의 대부분은 노동계급의 구성원이다. 지배계급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 때문에 노동자들은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 단결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특히 억압하는 국가의 노동계급일수록 다문화주의를 방어하는 것은 중요하다. 억압하는 집단의 노동계급이 자신의 지배계급에 맞서 피억압 집단의 권리를 확실히 옹호할 때 피억압 집단의 노동계급과 단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김인식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물론 노동계급의 투쟁 수위는 박근혜 정권과 사용자들의 맹공격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문제 같은 일부 전투들에

서는 패배하기도 했다. 핵심 문제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거듭 소심하게 뒤로 물러섰다는 점이다. 그들은 행동 수위를 제약한 뒤, 패배하면 투쟁 동력이 없었다거나 행동은 별 효과를 못 낸다고 말했다. 단연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었다.

그럼에도 2013년 박근혜 정권 취임 초기 노동자들이 보인 낙담·사기저하·우울·무력감·두려움 등을 떠올려 보면, 노동자들의 투쟁 자신감이 조금씩, 불균등하게나마 되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경제 상황의 악화과 친일 외교 행각 등이 겹치면서 할 만한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정권에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자 저항 덕분에 개혁주의 정당이 소생하다

조금씩 회복되는 노동자들의 자신감 덕분에 통합 정의당 같은 정치적 개혁주의가 소생했다. 이 말이 당장 이번 총선에서 통합 정의당의 의석 증가로 나타나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과 선거 정치 지형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순한 전망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히 지난해는 2012년과는 다른 정치적 공기가 감돌았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진보 정당들은 ‘각개 기어가기’를 했다. 진보 정치가 실패했다는 말이 유행여어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 안에서는 ‘노동개혁’ 저지 같은 노동자 운동의 핵심 의제를 부각시키는 데 총선을 이용해야(기다려야) 한다는 (잘못된) 기류가 형성돼 있다. 노동자들의 열의를 개혁주의 정당으로 표현하는 정당의 시존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공식 정치 영역에서 통합 정의당이 성장했다. (노동자 연대)는 이미 일찌감치 이런 상황 전개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최일봉, [2014년]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며 주의 할 것들’, (노동자 연대) 137호와 김인식,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노동자 연대) 150호를 보시오.)

특히, 공공노조·화섬노조·사무공연노조 지도자들 상당수가 통합 정의당을 지지한다. 이들이 정의당의 의회 지도부와 조직 노동계급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일부 좌파가 의회주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종국적 파산”을 선언한 것은 개혁주의의 생명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자, 실천적 함의로는 개혁주의 세력과의 공동전선을 기각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저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노동자 대중 외부에서 주장하는 사상이 아니다. 이런저런 개혁주의는 피착취·피억압 집단이 고통에 맞서 행동에 나설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첫 반응이다. 피착취·피억압 집단의 성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나고 자란 기존 사회 말고는 알지 못한다. 당연히, 기존 방식으로 조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자란 사람이 분홍빛 이미지 말고는 상상할 수 없듯이 말이다.



통합 정의당은 노동자 투쟁의 수혜를 입고 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의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

2000년에 작고한 팔레스타인 출신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가 지적했듯이, “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한,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없을 때, 노동자들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 변안하면 이렇 것이다.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저항할 만큼 자신감이와 성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나고 자란 기존 사회 말고는 알지 못한다. 당연히, 기존 방식으로 조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자란 사람이 분홍빛 이미지 말고는 상상할 수 없듯이 말이다.

자연스러운 첫 반응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썼듯이,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또,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어떤 사회의 “상식”은 지배적인 사상을 당연시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그 사회의 주요 특징이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서 자신들의 최초 요구를 제기한다. 그래서 봉건 사회에서 농민 반란은 흔히 나쁜 영주나 왕을 착한 영주나 왕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 경제 참부와 공산주의 ‘혁명’을 해결해 달라고 차르에 청원하면서 시작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협상이나 국회에 입법을 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사람들이 협상을 조직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방식에 기대를 걸 때 정치 운동으로서의 개혁주의가 떠오른다. 이렇듯 개혁주의 정당의 성장은 노동계급의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에 대해

진보 정치 세력이 통합 정의당과 진보당 계승 세력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진보 유권자의 표가 온전히 통합 정의당으로 물리지는 않을 수 있다. (두 세력은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중집은 선거연합정당의 대안으로 ‘총선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요구,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에 동의하고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 공세에 대한 공동 투쟁 조직화에 동의하는 정당, 정치 조직, 사회운동조직”과 함께 ‘총선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총선공동투쟁본부를 통해 지역 선거구에서 후보를 조정해 ‘민중단일후보’로 출마하고, 총선공동투쟁본부 참여 진보 정당들을 정당 투표 지지 대상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진보/좌파 다원주의에 입각하되, 진보 세력들이 최대한 후보를 단일화하지는 안이다. 민주노총이 그 내부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고려한 교육책으로 보인다.

이 주도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면 노동조합이 분열될 수 있음을 우려해 결국 선거연합정당 안을 폐기했다. 정당 지지 문제로 노동조합이 분열해 단결력과 투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말 민주노총은 표 결집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연합정당 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노동자 연대’가 오래 전에 제안한 전선체제 연합정당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현재의 구체적 한국 상황에서는 지지할 만한 방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연대’의 강조점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에서 범좌파 정당 건설 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본가 양당 체제 왼쪽에서 개혁주의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선거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논리였다.

그런데 통합 정의당은 방금 전에 4차 통합을 마친 터라 민주노총의 제안을 거절했다. 반면, 진보당 계승 세력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특히,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 활동에 무게중심을 두는 개혁주의 정당인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공식 정치 영역에서 통합 정의당의 부상 조직은 단지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지 아니다. 공식 정치가 다시 한 번 변화의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12년 말 박근혜가 이긴 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민주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통합 정의당이 빠진 채 진보당 계승 세력



영국에서 변화 열원의 구심이 된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가운데 노란 셔츠).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좌파적 개혁주의의 부상

2008년 경제 공황 이후 지속된 경제 침체 시기에 국제적으로 좌파 개혁주의에 대한 광범한 지지 추세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전에도 독일의 좌파당(디링케),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의 신당(파 그 뒤 좌파전선),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덴마크의 적록동맹, 한국의 민주노동당이 급진좌파 정당을 형성한 바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유럽의 우파 정부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개혁주의 정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긴축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이 커졌다. 환멸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지는 않았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거나,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이나 파시스트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더 급진적인 방향을 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급진좌파가 재등장했다. 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의 정당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수용하면서 당원 수와 유권자 기반이 감소했다.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들은 정치의 이런 점진적인 공동화(空洞化)를 메우고자 했다.

그리스에서는 2015년 초 시리자가 총선에서 급진적인 반긴축 강령을 내세워 집권했다. 시리자는 그리스의 커다란 공산주의 운동이 분열하면서 등장했다. 스페인의 새로운 급진좌파당인 포데모스는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21퍼센트(약 5백 20만 표)를 획득해 69석을 차지했다. 포데모스는 ‘본노한 사람들’ 운동 같은 사회 운동 속에서 등장해 기성 정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과 결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1년 전에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남아공에서는 경제자유투사당이 2014년 총선에서 1백만 표를 넘겨 득표해 (4백 석 중) 25석을 차지했다.

계급투쟁

이런 사태 전개에 핵심 추동력은 새로운 투쟁과 운동의 발전이었다. 그런 투쟁과 운동 덕분에 더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대안을 위해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계급투쟁 수준이 높으면 좌파의 공간이 확대되고 우파의 공간이 압착된다.

물론 국제적 정당 스펙트럼을 따르자면 통합 정의당은 결코 좌파적 개혁주의의 정당이 아니다. 통합 정의당 지도부 자신도 서구식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당의 강령도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을 표방한다. 그래서 통합 정의당은 과거 민주노동당보다는 정책과 실천 모두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더 가깝다.

예컨대, 정의당 지도부는 안보 문제에서 냉전 시기 서구의 반공주의적 사회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행보를 해 왔다. 지난해 1월 정의당 지도부는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종북과 선 국가”라고 보도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라고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했다. 올해 1월 북 핵실험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물론 그 당은 평화주의도 설파한다. 둘 사이에 모순이 있다. 그러나 정의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국가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노자 대담에서도, 정의당 지도부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가령,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일방적 추진은 반대했다. 확실하게 자본가 계급의 편을 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모순의 실천적 결론은 사회적 타협—계급 평화—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의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 야합과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의 배신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라고 두둔했다.

그러나 보수 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주류 양당 정치를 지배해 온 유럽과 달리, 한국의 양당 정치는 두 자본가 정당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 정의당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당과 맞붙는다면 사회주의자들은 환상을 갖지 말고 통합 정의당에 투표하라고 대중에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통합 정의당의 온건함 때문에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투표를 넣어 그 당에 입당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김준호

2월 1일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된다. 단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에 쏟아지는 지지다. 버몬트주(州) 상원의원인 샌더스는 2010년 부자 감세 법안 시행 2년 연장에 항의해 8시간 37분에 걸친 연설로 ‘필리버스터’* 행위를 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클린턴 지지 집회 참가자의 다섯 배가 넘는) 샌더스 지지 집회에 참가할 정도다. 특히 청년들의 지지가 두드러진다.

대기업 후원을 일절 거부하고 노동자·서민의 소액 후원에만 의존하는 샌더스는, 부유층 탈세 단속, 금융자본 규제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고, 연방 최저임금 인상(현행 10.1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종·성별에 따른 임금·노동조건 차별 철폐, 노년층 및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초·중등 무상교육, 대학 공공성 강화 등 서민층을 위한 요구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샌더스의 인기는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과 서민층의 생활 조건이 공격받고 불평등이 증대해 온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인 약 5천만 명이 공식 빈곤층이다. 공식 실업률은 5.4퍼센트이지만,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그 두 배 이상이다. 복지 수준도 형편없다. 취업 가능 연령대의 성인 네 명 중 한 명과 18세 이하 미성년자 여섯 명 중 한 명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업주와 부자들의 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1978~2014년 미국 최고경영자(CEO)들의 소득이 약 9백97퍼센트 상승했다. 반면 노동자 임금 상승은 10.9퍼센트에 그쳤다.

현 대통령 오바마는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노동자 민중의 염원에 올라타 집권했지만, 그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오바마 재임 기간에 빈곤층이 약 1천3백만 명 더 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가 인종차별을 누그러뜨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것도 시원찮았다. 미국 흑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28시간에 한 명꼴로 인종차별적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다.

오바마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우익이 결집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아래로부터의 저항도 조금씩 자라났다. 2011년 2월 위스콘신주(州)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무력화에 항의해 3주 동안 주 청사를 점거하고 투쟁했다. 그 덕에 미국에서는 수십 년 만에 노동자 투쟁이 주목 받았다. 교사·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이어졌다.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등 거리 항의 운동도 활력 있게 벌어졌다.

원동력

이런 운동에 담긴 거대한 변화 염원이 ‘샌더스 돌풍’의 원동력이다. 자본가 정당만이 존재하는 미국 주류 정치 공간에서, 이민자 2세 출신의 무소속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는 변화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에서 민주당 주류를 지지해 온 노동조합들 사이에서도 샌더스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이동통신 기업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에 맞선 통신노동조합 파업 집회에 샌더스가 참여해 지지 연설을 한 이후, 통신노동조합은 전 조합원 70만 명이 참가한 온라인 투표로 샌더스 지지 입장을 결정했다.

샌더스에게도 약점이 없지는 않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관한 샌더스의 입장은 민주당 주류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샌더스는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 지지 결의안에 찬성했다. 그 전에도 그는 팔

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중동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에는 반대했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지지했다. 그리고 이라크 점령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에도 여러 차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다른 여러 정책에서 샌더스는 민주당 주류와 상당히 구분되는 데, 예컨대 기후변화 정책에서 그렇다. 민주당 경선 후보 사이의 첫 TV 토론에서 샌더스는 ‘미국의 안전(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후변화’를 꼽으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퍼센트(부자)에 맞선 99퍼센트(서민)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샌더스가 노골적인 미국 자본주의의 주류 정당의 대권 주자로 선출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샌더스 자신도 말하듯 그의 “정치 혁명”의 의의는 선거 결과로 환원되지 않는다.” 샌더스의 선거 도전으로 김축·인종차별·불평등에 반대하는 열망이 표출되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근본적 사회 변화를 바라는 급진 세력들이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 축약되지 않은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정치인 연설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샌더스가 필리버스터 행위를 한 2010년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 하에) 상위 0.3퍼센트 부유층에 대한 9천8백억 달러 감세 조치가 통과될 상황이었다. 샌더스의 이때 연설은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북로그컴퍼니)에 전문 번역돼 국내에 소개돼 있다.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들의 죽음에 분노해 2014년 9월 이례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리 운동.



사진 출처(Credit: Source: 블로거)



2015년 12월 16일

현재 중동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차승일

현재 중동 상황은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시리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라며 일어난 대중 항쟁을 진압하고자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종파간 이간질을 수반하는 내전을 벌여 지난 5년 동안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미국과 서방 열강이 반동적 무장집단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를 핑계로 이라크와 시리아를 폭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부터는 러시아도 직접 폭격에 나섰다.

아이시스에 맞서는 국제적 대연합이 결성된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각자 속내가 다 다르고 아이시스 격퇴를 우선적 목표로 하는 세력이 없다. 미국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시스가 국가를 자처하며 '질서'를 흐리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는 중동 지역 내 유일한 동맹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자신의 옛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고 싶어 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든 그 속에서 일정 몫을 차지하기를 바랄 것이다.

제국주의 각축전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각축전의 틈바구니에서 지역 강국들(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카타르 등) 사이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탱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수니파 지하드 세력들을 후원하고, 이제는 이란과의 국교를 단절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해제된 상황을 보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터키의 주된 관심사는 쿠르드족의 독립 움직임을 억누르는 것이다. 그래

서 터키는 아이시스의 성장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바로 이런 얽히고설킨 상황 때문에 NGO들과 평화주의자들이 바라는 '정치적' 해법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현재 중동 상황은 더 큰 맥락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바로 세계경제 안에서 경쟁력 분포가 변하면서, 즉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며 지정학적 경쟁도 다각화돼 치열해지고 있는 맥락 말이다. 미국

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이용해 대처하려 했지만,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하며 오히려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유럽·중동 동아시아 등 세계 자본주의 주요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중동 전쟁에 발목이 잡힌 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증대하면서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요컨대 현재 중동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국제적·지역적 강대국들이 한데 모여 부대끼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질서 변화는 더 위험한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현재 중동 상황을 살펴보는 좌파가 중요하게 명심해야 하는 것은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든 러시아 제국주의든 모두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핵

심적)이고, 따라서 좌파는 그 누구의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좌파들 가운데 사회진보연대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가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개입을 모두 비판하는 입장에서 여러 글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입장에는 약점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진정한 문제로 보이는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민중의 소리〉의 진영논리

〈참세상〉, 노동계급정당추진위원회, 〈레디앙〉, 노동당 등 국내 PD계열 좌파들은, 특히 러시아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2015년 9월 말 이후에 관련 글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언론 〈민중의 소리〉는 선명한 친러 입장을 글을 보도하고 있다. 2014년 8월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폭격하기 시작했을 때 〈민중의 소리〉는 “시리아를 파괴하고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24일자 사설에서는 시리아인권관측소가 발표한 사망자 통계를 인용하며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말 러시아가 폭격하기 시작했을 때는 태도가 매우 달랐다. “러시아가 … 시리아의 알아사드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항하여 역사적인 군사 개입을 시작하였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시리아 반군과 민간인이 희생된다는 보도에는 “미국이 …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서방 언론을 동원하여 역선헌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를 변호했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에게는 죄송하게도, 앞에서 언급된 시리아인권관측소는 “[1월] 20일(현지 시간) 기준으로 러시아 전투기들의 공

습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1천15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2백3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6년 1월 20일치.)

물론 미국이 아사드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아사드를 제거하는 것과 시리아 국가를 해체시키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국가가 해체된 상황에서 아이시스가 성장했고, 아이시스는 다시 중동 '질서'를 더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동아시아에 외교적·군사적 역량을 더 배치하고자 하는 미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중요 중심지로 발전한 중동(특히 걸프해 연안국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득이 되지 않는다.

착시 효과

모종의 '진보적인' 국가들이 있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평형추'로서 그 국가들(예를 들어 중동과 유럽에서는 러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진영논리'라고 한다. 진영논리는 〈민중의 소리〉뿐 아니라 여러 국제 좌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는 두 가지 착시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이다. 첫째,

옛 소련을 사회주의 사회로 오해해서 냉전 시기에 일어난 미국과 소련의 지정학적 경쟁이 제국주의 간 경쟁임을 보지 못한 착각. 둘째, 냉전 종식 후 한 동안 세계가 단극 체제처럼 보였던 시기의 잔상이 그것이다.

진영논리는 제국주의를 미국으로 환원하는 이론적 오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레닌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는 자본들의 경제적 경쟁과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된 체제를 가리킨다. (김영익,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64호 참고)

진영논리는 실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 논리에 따르면, 미국과 경쟁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나 지역 강국을 지지하게 됨으로써, 제국주의에 맞서는 진정한 힘인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중요성을 깎아내린다. 시리아 내전에서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지지하라는 결론으로 이끌린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아이시스에 대한 〈민중의 소리〉의 견해도 러시아의 행보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민중의 소리〉는 2014년에는 “이제 ISIS는 시리아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미국과 이스라

엘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일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아이시스가 모종의 반제국주의 세력인 듯이 묘사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2015년 9월 이후에는 “러시아는 시리아 내 지하디스트들이 러시아에 오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말을 인용하며 격퇴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처럼 제국주의를 미국으로 환원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낳는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 외교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불문가지이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맺으며

현재 중동 문제의 핵심은 제국주의의 공세이고, 제국주의는 미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을 길잡이 삼아 현실에 적용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김영익

1월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보여 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의 것이든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제국주의에 맞선 ‘자위적 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이 낳은 가장 끔찍한 무기일 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날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수요 시위가 열리는 날이자,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정서가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큰 부담을 안고 있던 시점이었다. 박근혜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용해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 핵실험을 두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한국 정부는 매우 위선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국가들은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핵무기 전력을 갖고 있지만, 핵무기 개량에 30년 동안 1천조 원을 쓰기로 계획했다. 최근에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도 핵무기를 운용할 로켓군을 창설하고, 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7년까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새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고, 지난해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러면서 강대국들과 한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역내 국가들의 상호 갈등과 경쟁이 북한 지배 관료들을 자극했다고 봐야 한다. 이 점에서 일부 진보·좌파 단체들이 주로 북한을 규탄하거나 북한 핵실험과 한·미·일 동맹을 대등한 수준에서 비판한 것은, 핵실험을 둘러싼 구체적인 지정학적 맥락을 간과한 것이다. 핵무기 문제에서도 주변 강대국들의 핵 전력이 북한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강하다.

악마 취급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마로 취급해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려 해 왔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 ‘위협’을 크게 부풀렸다.

지금 미국은 유럽·중동·동아시아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해 파리 참사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으로 중동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자, 미국은 내키지 않는 중동 전쟁에 발목을 잡힌 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 핵실험 나흘 만에 수도권 상공에 전개된 B-52 전략 폭격기. 이런 무력 시위는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세계 1위·2위·3위 경제 대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거기에 러시아마저 역내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호주 등도 경쟁에 가세해 형국이 더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을 중심으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자신의 힘을 온전히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등 동맹국들이 안보 부담을 나눠 지기를 강하게 바라 왔다.

북한 ‘위협’론은 오바마 정부가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좋은 명분이 됐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북한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한 까닭이다. 북한은 2015년 1월 미국이 대규모 북침 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부해 버렸다. 이후에도 미국은 ‘선先 핵 포기’를 요구하며 북한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2015년 5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됐고, 9월 일본 안보법제도 일본 의회에서 강행 통과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아베가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는 데 좋은 핑계 거리였다.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문제를 놓고도 한·미·일 간 협의가 진행돼 왔다.

지난해 12월에 성사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합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만큼의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동맹은 주되게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지만, 북한한테도 커다란 위협일 수밖에 없다. ‘위안부’ 합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게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제국주의 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인 것이다.

핵실험 직후, 오바마는 박근혜와 통화하면서 다시 한 번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도전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박근혜도 이에 화답했다.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사드(THAAD) 배치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사드(THAAD)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국은 그만큼 더 깊숙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된다. 설사 사드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미국 MD 협력 수준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다. 박근혜의 담화 발표를 두고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MD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올해 안에 한미 간 실시간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해 한국과 미국의 MD망을 연결·연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MD 협력 강화는 결국 한일 군사 협력 문제와도 연결된다. 미국이 구상하는 동아시아 지역 MD는 한·미·일 3국의 유기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위안부’ 합의 후에 한·미·일 사이에 “정보·군수·기술 분야의 양자 또는 3자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명박 정부 때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나 한일 군수지원협정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공산이 커졌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국방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이 한국 측에 안보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 수입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됐다. 전체 수입액 78억 달러 중 70억 달러 이상이 미국산 무기 구입이었는데, F-35나 장거리고고도 무인정찰기 글

로벌호크 같은 첨단 무기들이 많았다. 한국 지배자들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와 북한 핵실험 때문에 앞으로도 군비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런 사태 전개는 당연히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도 긴장케 해 역내 불안정을 키우면서 군사적 위협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모두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반대해야 한다. 대북 제재 조치와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제재는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

하는 데다가 북한 관료보다 애꿎은 북한 인민들만 훨씬 더 고통받게 한다. 그리고 제재와 북한인권법 등은 모두 한·미·일의 대북 군사 압박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한일 군사 협력, MD 구축, 한국의 군비 증강, 대북 압박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도록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정의당이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자기 모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정부에 “북한 핵보유 시도를 저지할 단호한 대책”과 “확고한 안보 태세”를 요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결의안에 정의당 의원들도 찬성했다. 정의당이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적극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있다”(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는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정의당은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를 영입하면서 “외교·안보·국방에 있어서 더욱 신뢰받는 대안 권력”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 국면에서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과시형 국방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국방체계를 새롭게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의당 같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자본주의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유능함을 입증하려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제국주의적 갈등이 커지고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자국 지배계급을 편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강령에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를 표방하며 군축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파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규탄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이런 지향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다.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정진희

지난해 말 아버지 등에게서 학대받던 어린이가 감금 2년 만에 탈출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에는 부천에서 한 초등학교 생이 부모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뿐 아니라 미취학 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까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극 검토해 아동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모두 철저히 조사돼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 누리과정 논란에서 보듯 정부는 알량한 양육 지원조차 줄이고 있다. 심지어는 피해아동 지원책조차 거의 없다.

201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에 몇 가지 피해자 보호책이 포함됐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2016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예산은 지난해의 2백52억 4천 7백만 원보다 26.5퍼센트나 삭감돼



2016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1백85억 6천2백만 원에 그쳤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모든 시·군·구(2백26곳)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야 하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는 고작 1개소 늘어나 57개

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들의 40퍼센트가량이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쉼터·그룹홈은 2013~14년 4백89곳에서 도리어 4백76곳으로 줄었다. 아

동·청소년 쉼터·그룹홈 예산은 올해 6억 1천4백만 원 줄었고, 그룹홈 1곳당 월 운영비는 2013년부터 24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한국일보> 2016년 1월 19일치)

아동학대는 왜 일어나는가?

은폐되기 쉬운 아동학대의 정확한 규모는 결코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4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7천7백 89건에 이르고, 이 중 학대가 확인된 것은 9천8백23건이었다. 18살 미만 아동 1천 명당 1명이 조금 넘는데,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학대를 받은 10명 가운데 4명이 매일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갈수록 증가해 2014년 신고 건수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한국보다 신고가 훨씬 많은 미국에서는 2010년에 아동 1천 명당 약 9.2명이 학대당했다고 공식 집계됐다.

아동학대의 근원

최근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는 가해자들의 정서 불안과 비정함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아동학대를 단지 심리적 장애가 있는 개인들의 문제로 이해할 수는 없다.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동학대가 자본주의 사회에 물질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 같은 계급사회는 착취에 바탕을 두고 차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다. 불평등과 차별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제도에 스며들어 있다.

어린 아동은 무력한 존재고, 아동은

위계적 구조에서 최하위에 있다. 아동에 대한 권위주의적 취급은 가족, 학교, 복지기관 등 모든 자본주의적 제도에서 두드러진다.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지만, 지배자들은 아동 복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아동 복지 예산은 매우 적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외를 경험하며 종종 무기력감을 느낀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구조적인 것이지만, 지배자들은 실패를 한낱 개인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좌절한 사람들은 흔히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상황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심각한 질병은 모두 불평등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폭력범죄와 소득 불평등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평등이 답이다>, 이후, 2012).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살인율이 높고, 미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심한 주에서 살인이 더 자주 발생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분노를 종종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돌린다.

이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뿐 아니라 또래 집단 아이들 사이에서도 흔히 목격된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아이들은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종종 가난한 가정이나 이주민 가정의 아이들에게 돌리며 폭력을 가하거나 집단따돌

림 대상으로 삼는다.

아동학대와 가족

아동학대는 불평등한 계급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단지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특히 가족제도의 구실이 중요하다.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다. 한국의 통계에서는 가해자 대부분(82.1퍼센트)이 부모로 집계됐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아동학대는 주로 가족 성원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는 부모가 많지만 형제자매, 조부모 등도 적잖이 있다.

물론 아동학대가 단지 가족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도 아동학대는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소로 꼽히는 곳은 가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곳은 가족이고, 가족은 흔히 위계적으로 구성된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든,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적 가족 상(이미지)을 장려한다. 남자가 가장 중요하고, 여자는 그 다음이고 아이는 최하위 취급을 받는다.

가족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현재의 노동인구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인구를 낳고 기르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지배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족이 험난한 세상

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한다고 말하며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책임 따위를 설교한다. 이를 통해 지배자들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고, 보수적 가치관을 노동계급에 심어 주고자 한다.

가족은 매우 모순된 제도이다.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 위안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독한 불행을 경험하기도 한다. 냉혹한 이윤과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가족관계 밖에서 헌신적인 돌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남성과 여성이 사회의 성별 규범을 받아들이며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자 애쓰는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가족은 결코 바깥 세상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오히려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족 내에 영향을 끼쳐 가족관계에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곤 한다. 만약 가족이 '험난한 세상의 안식처'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가까이 있는 약자에게 분풀이를 해댄다. 학대당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나 형제자매 등 자기 가족 성원들에게 학대받는 이유다.

아동학대는 빈곤과 관련이 있다. 빈곤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 주요 요인이다. 물론 아동학대 발생을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부모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아이를 학대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발생에는 한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쉼터 보육사 1인당 연봉은 2천1백 12만 원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수준인 3천9백51만 원에 크게 못 미쳐 이직이 잦다. 보육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가량에 불과하다.

삭감

정부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담당할 상담원 수는 매우 적다. 전국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1곳의 상담원 인력은 기관당 평균 7명 수준인 3백64명에 불과하다.('2014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3년 이후 신고가 폭증하면서 상담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2014년 상담원 1인이 관리하는 피해 사례는 하루 평균 66.5건이었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관리 사례 수가 가장 많은 부산은 하루에 무려 1백 17.5건에 달했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상담원들은 전문성이 쌓이기도 전에 일을 그만둔다. 상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년 8개월에 그친다.(<한겨레> 2016년 1월 21일치)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은커녕 이미 발생한 피해자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며 책임을 떠넘길 뿐이다.

늘 돈에 쫓돌리고 형편없는 주택에 복작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부모가 좌절을 겪으면 아이들에게 불만의 화살을 돌리기 쉽다. 부모의 나이가 어리고 그들 자신이 학대를 겪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어릴 때 학대를 받으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 또는 마약중독에 빠지기 쉽고, 일부는 성인이 돼서 자기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연구들이 많다.

아동학대를 없애려면 가해자 비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의 사회적 요인들에 맞서야 한다. 처벌이나 신고 강화 같은 부르주아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들이 제시하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일 뿐 결코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아동학대 문제를 다른 경제·사회 정책과 분리해 다루선 안 된다. 실업과 대규모 빈곤, 열악한 주택, 높은 양육 부담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처벌에 주력하는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의 근원을 감추고 지배자들이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해고, 임금과 복지예산 삭감 등은 대중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며 많은 가정을 붕괴 위기에 빠뜨린다. 이런 지배자들의 경제·사회 정책들에 맞서 노동계급이 투쟁하는 것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계급은 비정하기 짝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하면서 아동학대도 뿌리 뽑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글은 25년 전 최일봉(현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글을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 **최미진이** 개작한 것이다.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¹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를 도운 노동자를 직무정지·대기발령시킨 것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아 한계가 있다. 게다가 사측은 이조차 불복해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

이 여성 노동자는 1년 넘게 상사한테서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사직하려는 이유를 알게 된 담당 임원은 가해자 징계절차를 밟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그만두도록 압력을 가했다. 피해자는 결국 법적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회사는 피해 여성을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고 나중에는 직무정지와 대기발령까지 내렸다. 이런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 노동자에게도 가해졌다.

이 사례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집약판”이다.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중앙회 소속 중소기업 사장들의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다 이를 사측에 알렸으나, 사측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약속을 폐기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목숨을 끊었다.

이밖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공장, 서울대공원, 대교(학습지 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나 소속 노조와 함께 공식적



“직장 내 성희롱 OUT”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2015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직장 내 성희롱 추방 캠페인.

으로 문제제기한 성희롱 사례만 여러 건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의뢰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² 결과(2011년 8월)를 보면, 최근 2년간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 경험률은 39.4퍼센트나 됐다. 경력 3~5년차의 경우에는 49.2퍼센트나 됐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자

존감을 해치고 근무 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등 고용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진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처음 공론화된 계기는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이다. 그 후 1999년에 이르러서야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조항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이론성과였다. 하지만 사측의 가해자 두둔,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 고용 상 불이익 조치 등 때문에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은 힘든 상황

1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어감 상 가볍게 느껴지기 쉽지만,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괴롭히기(harassment)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문제로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성희롱”이라는 단어

이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 성희롱 문제제기는 곧장 계약 해지 문제와 직결된다.

는 “싫어요”라고는 말하기 부담스럽지만 ‘이거 성희롱 아닌가요?’라고 농담처럼 주의를 환기시켜 그만두게 하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널리 사용했다는 설명도 있다(무타 카즈에, 《부장님, 그건 성희롱입니다》). 2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김정혜 외,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 연구》, 민주노총, 2011.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조합의 쟁점이 돼야 한다

성희롱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오늘날 새로운 점은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한국의 여성 임금노동자 수는 8백40만 명가량 된다. 이것은 전체 임금노동자 수의 44퍼센트에 해당한다. 이제 많은 여성들에게 직장은 더는 결혼 전에 잠깐 머물다 가는 임시 정류장이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물질적 조건의 변화는 여성 노동자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점을 전보다 더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우는 사례가 늘어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성은 천대받고 있

다. 가사와 육아의 주된 부담이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선 일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여성에 대한 체계적 차별 속에서 여성은 직장에서도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 노동자들은 사내 절차의 공정성을 당연히 불신한다. 사장이나 임원, 상사가 성희롱을 저지른 장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민주노총 실태조사를 보면 성희롱 가해자 중 사업주와 상급자가 65퍼센트), 이 때문에 회사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에 혈안이 돼 성희롱을 방치하고 여성 노동자들더러 참으라고 강요한다.

사내 절차가 아닌 성희롱 관련 법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오

래 걸릴 뿐 아니라 설사 성공한다 해도 일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결정적 해결책은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집단적인 노동조합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운동을 하고, 성희롱 당한 여성 노동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함께 싸우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훌륭한 일이다.

오늘날 여성 노동자의 수가 늘고 이에 따라 여성 조합원의 수도 늘어나 여성의 권리 획득을 위한 투쟁이 조합 전체의 역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에는 단지 ‘여성의 쟁점들’로만 여겨졌던 문제들이 이제는 노동조합의 쟁점들로 다뤄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여성 조합원이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노동조합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는 **계급적 쟁점**인 것이다.

계급적

노동조합 조직을 동원해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동료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에 항의해 다

른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가 함께 싸운다면, 경영진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항의가 생산에 미칠 악영향이 나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성희롱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성희롱 발생시 노동조합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조직적 해결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조항을 단협에 명문화하는 것도 과제로 삼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조합 유무는 성희롱 발생과 그 이후 대처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사내에 노동조합이 있을 때, 없는 경우에 비해 성희롱 피해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과 사무직의 경우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차이가 커서, 노동조합의 존재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특히 고의성이 강한 대가형 성희롱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있을 때 성

희롱 대응 이후 노동자들이 고용과 업무에서 불이익을 덜 받고, 성희롱예방 교육이 더 많이 실시되고, 사내 고충처리기구도 더 많이 마련되고 그 기구가 성희롱 발생 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2000년 롯데호텔 노조 파업과 사회보험 노조 파업 과정에서 여성 조합원들은 상사들한테 당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남성 조합원 동료들과 함께 투쟁해 승리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사장의 성희롱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민주노총 조직이 동참한 항의 운동을 통해 복직하기도 했다. 이 투쟁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다. 당시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전역의 현대자동차 공장·영업소 앞 팻말 시위를 벌인 국제적 연대로 현대자동차 측에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런 사례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투쟁을 노동조합의 과제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겨레〉의 오해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지난 1월 11일 〈한겨레〉는 ‘2013 소득세법 개정, ‘서민 세금폭탄’ 아닌 ‘부자 증세’였다’ 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 연보를 분석해 보니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금이 늘었고 그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더라는 것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난 데 불만을 터뜨렸는데, 〈한겨레〉는 이런 불만이 별 근거가 없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사설에서는 모든 계층에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근로자 절반이 세금 안 내는 소득세제 손봐야). “저소득계층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 고소득자의 낮은 세금 부담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이 이유다.

한 기사에서는 ‘부자 증세’였으니 문제 없다고 해 놓고는 다른 글에서는 ‘노동자 서민 증세’가 필요하다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한 셈이다.

사실 그동안 〈한겨레〉의 세금 관련 보도를 꼼꼼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한겨레〉가 실제로는 ‘부자 증세’가 아니라 ‘보편적 증세’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당시에도 새정치연합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세제개편을 ‘세금폭탄’이라며 비판할 때 〈한겨레〉는 거꾸로 ‘세금폭탄론’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정작 정부는 노동자들의 불만에 놀라 허겁지겁 보완 대책을 내놓았는데 말이다.

당시 박근혜는 불만이 확산될까 봐 서둘러 ‘유감’을 밝혔고 이례적으로 세금 정산이 끝난 5백41만 명에게 4천2백27억 원을 환급해 줬다.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도 백지화했다.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한겨레〉처럼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경제 위기 시기에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끔찍한 불평등 노동자들의 소득세 인상이 복지 강화로 이어질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려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낸 세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믿음도 깔려 있다.

물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액(유류세 등) 혹은 정율(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에 비해 소득세의 누진율이 큰 것은 사실이다. 저소득층은 아예 면제해 주거나 6퍼센트 남짓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최대 38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을 대폭 낮추고 소득세 같은 직접세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

노동자 증세

그럼에도 〈한겨레〉처럼 정부의 소득세 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심지어 소득세를 일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첫째, 현행 소득세의 누진율은 실제 빈부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연소

득 6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세금이 늘었는데, 그중에는 연봉이 수십억 원이나 되는 기업주들과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진짜 부유층도 포함되어 있지만 월급 외에 소득이 없는 일부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소득이 세금 부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기 때문이지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해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일괄 인상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노동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든, 편의점에서 커피 한 병을 사든 누구나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도 대폭 인상

해 세금을 수조 원 더 거뒀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사회보험료는 제도상 분리돼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세금의 일부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정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데다 소득기준 상한선까지 있어서 한층 더 불공평하게 짜여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세금제도에서 진정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기업주들과 소수의 부유층이다. 특히 금융·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에 비해 훨씬 적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증세론’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자들의 소득세 인상이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지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육대란 사태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지 않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연금 삭감도 마찬가지다.

이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여 국가 신

인도 하락을 막는 한편 법인세 등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이 나라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퍼센트가 안 되는데도 박근혜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은 조금도 열어두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이뤄진 소득세제 개편은 근본에서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조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일부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의 전체 세금 부담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거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반면 ‘연소득 6천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은 늘었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장차 더 많은 노동자들의 소득세가 인상될 것이다. 초고소득층 일부에게 추가로 거둔 세금은 생색내기 수준이라 재정 확대에 별 도움도 안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제공될 복지 비용을 기업주들이나 진짜 부유층이 아니라 노동계급 내 다른 일부에게 떠넘겼을 뿐이다. 이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나마 이런 반발이 없었다면 수백만 명이 세금 부담을 추가로 져야 했을 것이다.

〈한겨레〉가 보편적 증세를 통한 복지라는 생각에 갇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박근혜 편을 든 것은 자유주의 언론의 한계를 잘 보여 준다.

복지 재정을 늘리려면 애꿎은 노동자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윤을 독차지하고 각종 혜택을 누려 온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 양극화를 반영해 각종 직접세의 누진율도 대폭 올려야 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142호 보충판에 실린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를 참고하시오.)

장호중

세종호텔

“성과연봉제는 임금삭감·현장통제·민주노조탄압 수단”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약’의 하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려고 한다. 기업주들은 수년 전부터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연공급제를 공격하고, 임금을 ‘성과’와 연동시키고 싶어 했다. 성과급제가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가 어떤 폐해를 낳을지는 세종호텔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친사측 노조인 세종연합노조를 활용해 2012년에는 과장급 이상, 2014년에는 계장급 이상의 노동자에게 연봉제를 실시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다. 또 전년도 대비 “연봉 조정률을 ± 10 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

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연봉] 조정률을 ± 30 퍼센트로 할 수” 있게끔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측 멋대로 삭감됐다.

올해에도 계장급 이상의 노동자 대다수가 5~30퍼센트가량 임금이 깎였다. 24년차인 어느 노동자의 연봉은 4년 전 5천만 원가량에서 이제 2천6백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14~15년 전 임금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호텔에서 계장급이나 과장급이면 대부분 40대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 교육비 등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들 때죠. 그런데 이렇게 임금을 가차 없이 깎는 것은 사실상 회사에서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

작년 사측이 과장급 이상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내쫓을 때도 연봉이 대폭 깎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노동자 30명가량이 이 협박에 못이겨 정든 직장을 나가야 했습니다.”(조주보 세종호텔 노동자)

비합리적 근거와 일방적 통보

세종호텔의 취업규칙(정규직 연봉제 규정)에는 “인사고과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연봉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평가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연봉이 결정된 구체적 기준과 결정 이유, 산출방법을 밝히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대

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측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왜 이런 연봉이 책정된 것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연봉 통지서를 받아 볼 뿐입니다. 노동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제서야 몇 가지 [연봉 삭감] 이유를 알려 주지만, 이 역시 전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조주보)

올해 몇몇 노동자들이 연봉 통지에 이의신청을 하자, 사측은 “상관의 업무 지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업무를 함에 있어 수동적인 자세로 임함”, “협업 부재”, “업무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측의 과도한 업무에 항

의해서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도 연봉 삭감의 이유가 됐다.

“올해에도 입단협이 있는데, 사측은 이미 연봉제를 주임이나 사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측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팀장이 고과평가를 하니깐 연봉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당연히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찍히지 말아야 하니깐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에도 이의제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김상진 세종호텔 노동자)

또, 연봉제는 사측에 저항하는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독자편지

2016년 2월 14일(일)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KT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활력 제고법안도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재벌과 부자들의 재산만 더 불리겠다는 친기업 노동개악 공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이런 반노동자적인 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통쾌하게 좌절됐다.

박근혜가 서명한 다음 날인 19일, KT정읍지점에는 정읍상공회의소 명의의 협조요청 공문이 도착했다(사진).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경제 위기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을 돌파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국회에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므로, “국가 경제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오니 귀사의 임직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KT 직원들을 서명운동에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정읍지점에 근무하는 KT민주동지회 직원이 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서명을 한 상태였다. ‘다른 팀원들은 다 서명했

는데 왜 서명 안 하느냐’는 말을 듣고 서명지를 찾는 직원의 모습도 보였다.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른 강제적인 서명 동원이 있었던 것이다. 관리자들은 KT민주동지회 회원이 항의하자 팩스로 받아서 서명지를 돌렸을 뿐이라고 발뻘했다.

KT민주동지회는 이 소식을 접하고 즉각 ‘노동개악 입법 강행을 위한 서명운동에 KT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지 마라’는 성명서

를 발표하며 항의했다. 성명서에서 KT민주동지회는 노동자 죽이기 법안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적인 서명동원은 KT 황창규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KT노동조합이 회사의 강제적 서명동원을 중단시키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민주동지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각종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자 회사는 다급히 서

명운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듯하다. 오후부터 서명 작업은 중단됐고 다른 지사, 지점에서도 이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는 소식은 없었다. KT민주동지회의 신속한 대응이 KT 노동자들을 노동자 죽이기 서명운동에 동원하려 한 어처구니없는 짓을 막아낸 것이다. 앞으로도 KT민주동지회는 KT 노동자들을 서명운동에 동원하려 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막아낼 것이다.

이원준 KT민주동지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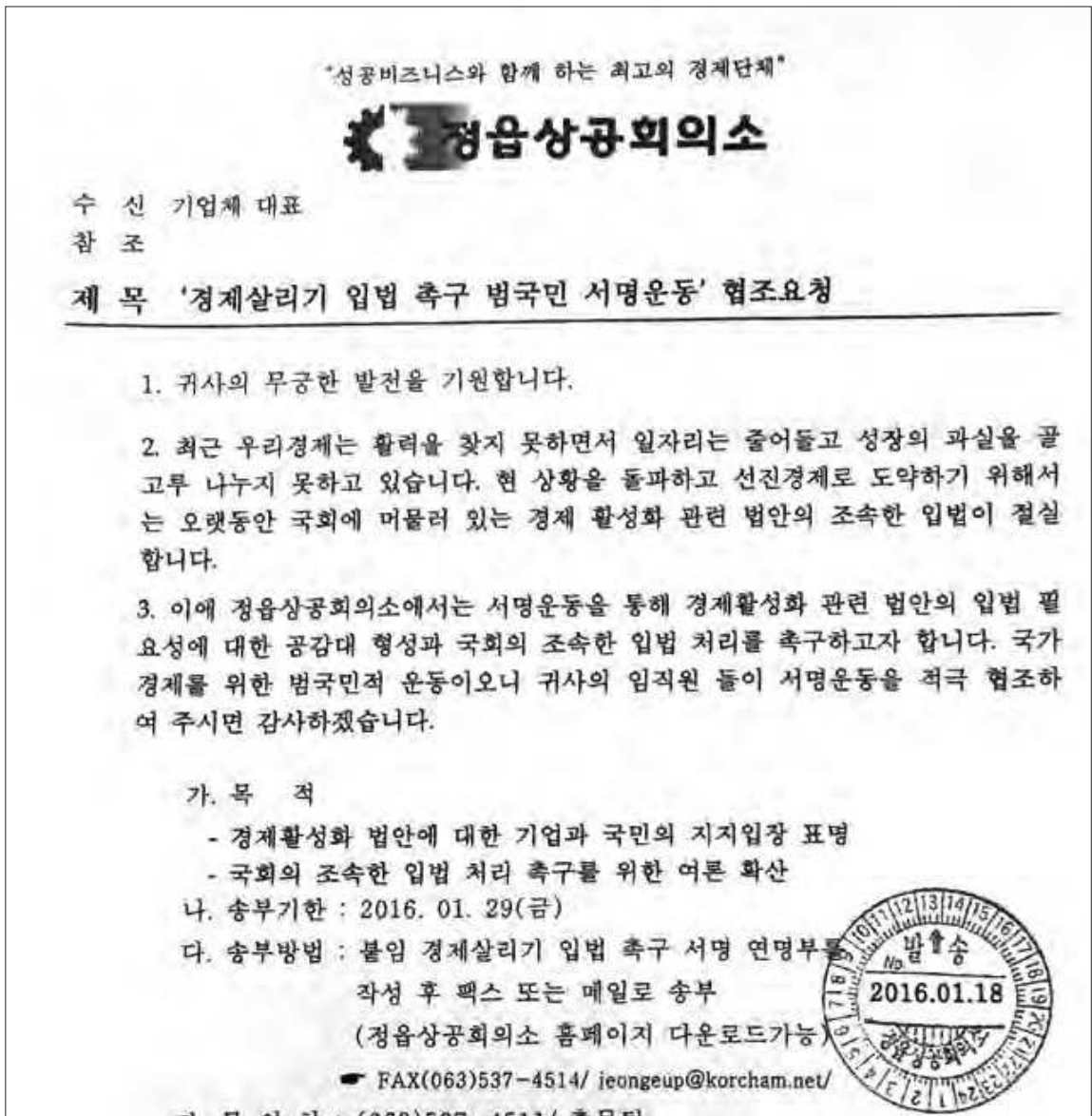


사진 출처 KT민주동지회

한스코퍼레이션

“노동개혁”은 외주화 가속화하므로 노동자에게겐 재앙

나는 세계 5위, 국내 최대의 자동차 휠 전문 제조기업 한스코퍼레이션에서 관리부 운송업무(물류지원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회사는 2년 전부터 납품을 하는 차량 운전 업무를 매각·외주화하려다 민주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후퇴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꾸준히 계약직 사원을 늘려 왔다. 지금 회사는 뚜렷한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이란 심지에 불이 붙는다면 계약직 사원의 해고도 더 쉬워질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노동개혁’을 등에 업고 회사는 다시 한 부서의 외주화를 시도하려 했다. 이것이 탄로나 반발에 부딪히자 회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로 납품차량 5대 중 3대를 외주화하고(2대는 보류), 그 차량을 몰던 8명을 전환배치했다. 운전기능직으로 차량을 몰던 동료들이 적성과 체질에 맞지 않는 생소한 직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회적인 해고 절차다.

한 기업에 뼈를 문고자 입사한 직원들의 피고름마저 다 짜내고 나서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것이다.

국한적인 위탁업무가 전방위로 확대되면 휠제조업의 특성상 한스코퍼레이션은 전 공정에 외주업체가 침투할 수 있다. 뿌리산업에 파견을 도입하는 노동개혁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부서가 하청기업으로 득실거릴 것이다.

경영악화로 인한 한계기업의 최종수단이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한스코퍼레이션은 심각한 누적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구조조정을 하며 이윤 추구와 노조 파괴라는 일석이조를 꾀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막아야 할 재난이다. 역사와 시대를 역행하는 개혁이란 탈을 쓴 개악은 죄악이 될 것이다.

최영호 한스코퍼레이션 노동자

“[민주노조인]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연봉 삭감 비율이 더 높습니다.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가 임금을 가차없이 깎는 거죠. 강제로 전환배치해도 곳곳이 버티니까 경제적으로 목을 죄어오는 겁니다.”(조주보)

“노동자가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 보여 줄 것”

세종노조는 연봉제 폐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전보·부당해고 철폐,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혹한의 날씨에도 매일 호텔 앞 팻말 시위와 매주 목요일 집회를 하고 있다.

또, 연봉제로 임금이 대폭 깎인 노동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근로기준법 17조 위반), 교섭대표노조인 연합노조 지도부가 세종노조와 연봉제 대상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연봉제에 합의했기 때문(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뻔뻔하게도 연합노조 지도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해 세종노조에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종노조는 “연합노조 지도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연봉제 확대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봉제는 노동자들에게 어느 하나 이로울 게 없습니다. 이미 인사권을 쥐고 사측이 노동자들을 강제로 전환배치하는 상황에서 임금마저 사측이 멋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해선 안 됩니다. 연봉제 확대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연봉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세종노조는 비록 소수노조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키고 불만을 대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김상진)

사측의 탄압에서도 곳곳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자.

성지현



연봉제 폐지, 강제전보 철폐 등을 요구하며 매주 목요일 호텔 앞 집회를 이어가는 세종노조 조합원들.

평범한 사진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김문성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말한 지방교육교부금 41조원은 교육교부금법이 정한 비율(내국세의 20.27퍼센트)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된 액수다. 문제는 이 비율이 박근혜가 무상보육을 공약한 2012년 이전에 정해진 비율이라는 것이다.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은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의 ‘공약’이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출산율을 제고하겠다고며 이명박 때 (박근혜의 동의 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에 따라 더 지급해야 할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중앙정부, 즉 박근혜 정부다. ‘배신의 정치’로 심판 받아야 할 장본인은 정작 박근혜 자신인 것이다.(그래서 박근혜에게는 ‘유체이탈 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최근의 정치적 갈등을 박근혜와 대화로 풀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컨대 반년도 못가 화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보육 대란과 임금 체불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무상보육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의 요구대로 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다른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형 급식 뺏아서 동생 보육비 주라는 말이냐’라는 항변이 나온 이유다.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해 온 이유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달이 났지만 당시 각 교육청들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예산을 편성했다. 당장 보육 대란을 두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마저 이런 식이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굳어질 수 있어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지자체(교육청)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정부 지원을 받아 낼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애초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까지 막히고 있다. 지방의회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도 승인을 (새누리당이 다수인 곳에서는 보복성으로, 야당이 다수인 곳에서는 압박용으



책임전가 박근혜의 몽니로 노동자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이 보육 대란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무상보육 재정 책임을 떠넘기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 죄 없는 보육교사들의 1월치 임금이 대량 체불될 상황이 됐다. 박근혜의 몽니 탓에 교사와 학부모(대다수는 노동계급인) 모두 고통을 겪는 것이다.(아마 일부 지역들은 편법으로 1, 2월치 예산을 지급할 듯하다.)

교육 개혁

사실 이날 박근혜의 관련 발언은 앞뒤도 맞지 않았다.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쓰라고 준 돈을 썼다고 상을 준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물론 ‘인센티브’를 빙자한 박근혜의 협박에는 “교육 개혁”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은 수익성 논리와 기업들의 수요에 걸맞도록 교육 재편을 가속하는 것이다.

1월 20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위해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성 논리로 재정평가가 진행되면, 예산을 먼저 더 많이 확보하려는 교육청 간 경쟁은 교육 노동자들의 임금, 학생 정원, 교육 복지 등을 삭감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 교육감들을 견제하면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확대 같은 진보적 의제가 2010~12년 때처럼 선거에서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책략도 숨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물러서지

말고 정부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계속 싸워야 한다.

복지는 긴축, 기업은 부양

이런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긴축이라는 경제 위기 대응 기조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기업주와 부자를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다.

박근혜는 긴축을 이유로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했다. 필사의 전투를 벌여 공무원연금도 삭감했다. 돈이 없으면서 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해 왔다. 기업 지원도 활발했다. 최악의 전월세 대란 속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더 열을 올렸다.

최근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작은 복지마저도 비난·방해하거나, 대상 규모도 액수도 초라한 서울시의 청년 지원을 정부가 소송까지 제기한 일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긴축을 지방정부에게까지 강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지급 거부로 정작 지방교육청의 빛은 더 늘었다.)

배신을 그토록 싫어하는 박근혜가 자기가 약속한 무상보육을 자기 손으로 흔드는 것이 단지 개인의 ‘흔이 비정상’이라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무상보육 ‘먹튀’에 항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반대하는 일과 연결된다. 노동운동과 좌파는 ‘노동개혁’ 저지 투쟁을 건설하면서 박근혜의 무상보육 예산 책임 외면에도 반대해야 한다.

긴축에 반대하고,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요구하자

정부는 경제 위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 정부의 세금 수입도 따라 줄기 때문에 국가 지출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라는 압력은 그리스에서 보듯, 국제적인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에는 국가지출의 필요가 오히려 더 커지므로 여전히 소득과 자산이 많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지출을 늘릴 수도 있는데, 박근혜는 일관되게 (부자) 증세를 거부해 왔다.

이는 박근혜가 이윤율이 낮아져서 투자 외 지출(세금, 임금 등)을 줄이려는 기업주들의 요구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의 목적도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해 주려는 데에 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역대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삭감해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박근혜가 지향하는 긴축 정책은 단순한 재정 아껴쓰기가 아니라 친기업적 이윤 보전 정책이다. 이 말은 국가의 지원과 지출이 모두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부자를 위한 경기 부양과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에는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도리어 노동자에게는 증세하면서 복지를 삭감해 왔다.

그러나 경제 위기일수록 책임 전가



저항 긴축 강요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와 소득 하락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은 심해진다. 이야말로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에게는 ‘안전’의 위기다.

이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그 재원은 당연히 위기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과 부자들이 져야 한다. 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을 어렵게 하는 보편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